

3野 “연동형 비례제 도입, 대통령이 나서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및 당직자들이 28일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원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결의대회... 민주·한국당 압박 홍영표 與 원내대표 “의원정수 확대 방안부터 정리돼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8일 결의대회를 열고 원내 제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에 소극적이어서 소수정당의 의지대로 선거제도가 개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보좌진·당직자 등 100여명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는 없다. 지금 민심은 정치가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한 대표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했다”며 “그러나 지금 피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숫자는 많은데 정치적 힘이 없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정치적 힘을 되찾아주는 ‘내 표 어디갔소’, ‘죽은 내 표 살리기’ 운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운동”이라며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노예해방제 반대자들을 설득해 위대한 일을 해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길을 가려면 선거제 개혁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15년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 민주당은 가장 합리적인 안이며 자신들의 당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며 “그 입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다음 총선의 유불리에 대한 선택이 가동됐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뒷집고 한국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거대양당의 왜곡된 정치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는 기존 당론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자

유한국당이 1명도 늘릴 수 없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말을 바꿨다고 한다’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나 우리 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전혀 없다고 본다”며 “야당의 문제제기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연동형으로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단계의 논의로 나아가지 않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려는 식으로 하는 건 생산적 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출국 전 “선거제 개편을 이번엔 꼭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소개했다.
선거제 개편을 반드시 하되 소수당들의 의도대로 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유치원 3법’ 발목 잡는 한국당

법안 발의 안돼 심사 일정 미루기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입명 박용진 3법) 법안 심사가 28일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법안을 제출하면 오는 12월3일 예정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예초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 심사를 다음 법안소위로 미루기로 했다.
앞서 여야 5당은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번 주 초 사립유치원 관련 법 초안을 마련해 전문가 검토를 마쳤지만, 문구 수정 등 부수적인 작업으로 국회

제출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 더는 미룰 수 없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면 다음 법안소위가 마지노선”이라며 “유치원 관련 법 처리는 12월 3일로 시한을 정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 시작에 앞서 유치원 관련 법 처리 연기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을 이어졌다. 한국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자체 법안 논의를 위해 회의에 45분 늦게 참석하기도 했다.
한국당 박상도 의원은 “오늘 법안 발의는 어렵지만 여야 간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12월3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친박·비박 중진들 김병준 성토

한국당 연석회의... 정우택 “의견 개선 계파 치부해선 안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계파 구도 확산에 대한 경고를 한 데 대해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 중진의원들이 28일 공개 석상에서 한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친박계로 분류되는 정우택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이 ‘계파대결 구도를 다시 살려서 덕을 보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일문적 말씀엔 동의한다”면서도 “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 개선에 대해 계파의 목소리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대위가 진행하는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와 관련해선 “바른미래당 소속 5~6명이 기습 복당을 하고 그들이 당협위원장으로 돌아온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다”며 “저는 이것을 소문으로 치부하지만, 당의 운영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박계인 이근현 의원은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고 하면서 특정 계파 사람을 잘라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통합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협위원장 교체는 계파가 아닌 당선 가능성 등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문 의장, 종부세 인상 등 예산 부수법안 28건 지정

내일까지 처리 불발시 다음날 본회의 자동 부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28건 중 정부 제출 법안은 17건, 의원 발의 법안은 11건이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다음 날인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


의 의견을 들어 같은 이름의 법안 중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도 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면 일부 법안은 자동 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 중에는 종부세율을 주택 기준 0.5~2%에서 0.5~2.5%로 상향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제출된 법안이다.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500만원에서 700

만원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부수법안 중 정부가 제출한 17건의 법안은 모두 기획재정부원회 소관이다.
의원발의 법안 중 민주당 제출 법안으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기재위 소관)이 부수법안 지정 목록에 올랐다. 이 법안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내용을 담는 것으로, 주택기준 0.5~2%에서 0.5~3.2%로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수의 지방세분율 11%에서 15%로 인상하

고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도 올리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기재위·행정안전위·교육위 소관)도 포함됐다.
한국당 제출 법안으로는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추 의원 발의 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5%에서 20%로 인하하고 최저한도세율도 100억원 이하 10%에서 8%로 내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발의 법안은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 2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탈원전 경솔... 국민투표 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8일 “우리도 대안과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원전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장치가 성숙한 마당에 우리가 탈원전을 하는 것이 경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원전을 포기한 상황에서 해외에 원전을 팔려고 하면 상대국이 이를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준학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들은 단기 대책이 아니라 경기회복과 경제 수요 증가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인상은 없다’고 안심시켜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를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고용이 살아나고 소상공인이 편해진다”고 당부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